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48호

「대부업등 감독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2월 16일

금융위원회

### 「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」 입안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개정 대부업법('15.7.24일 개정, '16.7.25일 시행), 동법 시행령 개정(안)이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\* 및 서식 등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

\*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,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등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서민금융상품 오인 광고 금지(안 §11)

- 대부업체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허위·과장광고로 인해 서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

\* '15.8월 현장점검시 미소금융이 '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을 마련'해 줄 것을 건의

⇒ 대부업체가 미소금융, 햇살론,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  
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

\* 동 의무사항 위반시,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(2,000만원 ↓) 등 가능

## 나.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(안 §12①~⑤)

\*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 선임의무가 있음

○ (업무범위)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,  
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견 표명, 업무정지요구 등을 추가

\* 시행령(안)상 보호감시인의 업무 : 거래상대방 보호 계획수립·시행, 임직원 교육 등

○ (겸직금지의무 등) 보호감시인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위해 자산  
운용 및 대부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,

-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부업체가 보호감시인에  
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

## 다.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(안 §12⑥)

\* 개정법상 자산 2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의무가 있음

○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, i) 신용정보 보호, ii) 대부광고  
관련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

\* 시행령(안)상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필수 반영사항 :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 
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, 보호감시인의 임면절차, 불법추심 방지 절차 등

## 라. 손해배상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(안 §15, §16)

○ (보증금 지급)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협회에  
보증금 지급을 직접 청구토록 규정하고\*,

\* 개정법상 대부협회는 대부업체의 손해배상 보증금의 예탁 관련 업무를 수행

- 협회는 피해 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(손해배상합의서,  
확정된 판결문 사본, 화해조서 등)를 검토한 후 배상금을 지급

- (보증금 반환) 대부업자는 대부영업 종료 이후 잔존채권이 없는 경우\*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고 등 절차 진행 후 이를 반환

\* 대부업체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대부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시까지 대부업체로 간주(法§14)

#### 마. 그 밖의 사항

- (결격사유) i)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
ii) 산림조합법을 위반한 자의 경우도 대부업체의 대주주 및 임원·업무총괄사용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

\* 시행령(안)은 은행법, 보험업법, 여전법 등 46개 금융관련법령 위반자는 대부업 등록 신청 등이 불가(令§4)

- 그 밖에 등록(갱신)신청서,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등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을 위한 서식을 정함\*

\* 감독규정 제정에 따라 기존 서식관련 규정(금융위 고시 2015-20호)는 폐지

### 3. 의견제출

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, 전화 : 02-2156-9475, 팩스 : 02-2156-9479, 이메일 : surf99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
및 기타 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주소 : 100-745 서울시  
중구 세종대로 124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  
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